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의 문제*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장 덕 현(D. H. Chang)**

〈 목 차 〉

Ⅰ. 연구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Ⅱ. 국내외의 지적자유 관련 동향
Ⅲ. 장서개발에 있어서의 논점
1. 선정 vs. 검열
2. 국내외 도서검열 사례분석
3.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Ⅳ. 결 론

초 록

이 글은 장서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자유의 의의를 고찰하고 관련 사례를 일별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관찰되는 지적자유의 의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공권력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알권리의 개념 등 제도적 장치와 도서관계의 노력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건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서 지적자유의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지적자유, 장서개발, 검열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portray the issues of intellectual freedom that confront librarians in developing collections in libraries. It is observed that the issue has hardly been drawn attention in Korea while, from various cases, concerns about intellectual freedom have been increased in many countries. Situated in this observation, this paper surveys various aspects of endeavors to protect intellectual freedom in information service settings. It is also stressed how such issues as free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to know, information barriers in public sector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addressed in library world. Emphasis was also put on the meaning of intellectual freedom as viewed through some policy documents and guidelines in other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Keywords: Intellectual Freedom, Collection Development, Censorship

* 이 과제는 2008학년도 부산대학교 교수해외장기파견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chang@pusan.ac.kr)
• 접수일: 2011년 2월 22일 • 최초심사일: 2011년 3월 9일 • 최종심사일: 2011년 3월 28일

www.kci.go.kr

Ⅰ. 연구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입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사회의 시민들에게 보장된 가장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정보, 자료, 기록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공비성과 공개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적 장치가 도서관과 기록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와 통신 인프라의 확장을 경제적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거대 정보통신기업의 공생관계에 의해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며 사회 구조와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 푸코(Foucault)가 말하듯 지식은 언제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제나 권력에 의하여 사용되고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식과 권력은 단순히 관계가 있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지식을 창조하고 또 제거하는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므로 결국 권력이 곧 지식이며 지식이 곧 권력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기하는 것이야 말로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에 따른 정보 중개자로서의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론화된 계기가 1930년대 미국에 있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부터 1950년대의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있었던 연이은 검열사건에 대한 사서들의 반대입장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발표한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199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도서관활동의 기반원리로서 지적자유의 원리를 채택하여 이를 도서관 봉사의 철학적 근간으로 채택하기까지 도서관에서 정보의 공공성과 정보접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1] 더욱이 이 문제는 최근 도서와 같은 전통적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유통 과정에서의 검열문제를 넘어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통신환경에 있어서의 검열(Filtering)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핵심인 장서문제에 있어서 지적자유의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1) 장덕현, "지적자유와 도서관 : IFLA/FAIFE 활동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제42권, 제6호(2001. 12), pp.42-46.

www.kci.go.kr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장서개발에 있어서의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적자유는 언술의 자유(Free Speech), 독서권(Freedom to Read), 정보에 대한 접근권(Open Access to Information),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2] ALA는 지적자유를 '모든 관점으로부터 제한 없이 정보를 찾고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로 정의하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문점, 원인, 양상 등을 섭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상적 표현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검열(Censorship)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작의 내용 문제로 인하여 공권력이나 기타 압력에 의하여 자료의 접근 가능성에 야기되는 변화'로 정의하며, 제외, 제한, 제적 또는 독자연령대 설정 변화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3]

정현태에 의하면, 지적자유는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부 권력의 개입, 즉 사상의 전달매체로서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따라서 도서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골고루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자유를 수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LA의 도서관권리선언이 도서관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읽을 자유의 수호를 위한 사상과 정보의 광장(Forum)이라고 명시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도서관 장서에 가해지는 제약과 도서관 내/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용자 모두의 정보이용 및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 활동의 기본철학을 표현하는 것이 도서관의 주요 활동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5]

도서관계에서도 대표적 국제기구인 IFLA가 중심이 되어 지적자유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산하의 FAIFE위원회(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 : Committee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를 주축으로 세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증대시키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

2) G. Edward Evans and Margaret Z. Saponaro,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Westport, CT. : Libraries Unlimited, 2005), p.410.
3) ALA, "Intellectual Freedom/Censorship," 〈http://www.ala.org/ala/issuesadvocacy/intfreedom/index.cfm〉 [cited 2011. 1. 5].
4) 정현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p.244.
5)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11.

www.kci.go.kr

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에서 구현해야 할 지적자유의 의의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특히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관련 이슈들을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공권력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알권리의 개념 등 제도적 장치와 도서관계의 노력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건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서 지적자유의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는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자료와 원자료, 선언문, 신문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국내외의 관련연구를 일별하여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자유와 관련된 규정들과 지침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ALA의 *Intellectual Freedom Manual*. 7th Edition(2006), IFLA의 *Internet Manifesto* 및 IFLA/FAIFE의 *World Report*,[6] IFLA와 FAIFE의 ListServ 등의 원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의 검열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적자유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의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

Ⅱ. 국내외의 지적자유 관련 동향

지적자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반공주의의 영향에 따른 검열 및 사상통제 사례에 대하여 도서관계의 반대입장이 공론화되면서이다. 연이은 이념논쟁과 사상통제(red scare)에 대응하여 미국도서관협회가 1939년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을 발표함으로써 도서관은 모든 사상과 의견이 공유되는 광장이며, 어떠한 도서나 자료도 그 제작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 사상적, 인종적 이유 때문에 배척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IFLA가 도서관과 정보유통에 관련되는 지적자유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구인 FAIFE 위원회를 중심으로,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6) Theo J. Bothma, 2010 IFLA World Report, 〈http://www.ifla-world-report.org/files/uploaded/ifla_wr/IFLA-WR-2010-Analysis-and-Conclusions.pdf〉 [cited 2011. 1. 7].

www.kci.go.kr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7년 코펜하겐 연차총회를 계기로 조직된 FAIFE위원회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들 중 도서관과 관련있는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위원회 활동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선 지적자유는 개인의 의견을 유지, 표현하고 정보를 추구, 입수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동시에 도서관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FAIFE는 2001년 이래 격년간의 국제보고서(IFLA/FAIFE World Report)를 발간하여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도서관 및 정보유통 관련 영역에 있어서의 정보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유통 이외에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의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등급제와 검열(Filtering)과 같은 문제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특히 2008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터넷 블로거 미네르바 사건이 주요 사건으로 수록되기도 하였다.[7)]

지적자유 보장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경우 산하에 '지적자유사무국(OIF :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을 설치하여 사서들에게 지적자유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적자유와 관련된 각종 간행물 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OIF가 발간하는 *Intellectual Freedom Manual*은 2010년 하반기 제 8판이 출간되었는데, 오늘날 지적자유 활동과 관련하여 도서관 활동의 영역으로, 1)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용자접근과 지적자유 보호 문제 ; 2) 〈도서관권리선언〉의 이념과 지향 ; 3) 독서권 보장의 문제 ; 4) 미국도서관협회의 활동 등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사무국 이외에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독서권재단(Freedom to Read Foundation)', '지적자유소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 등의 각종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선언,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하여 지적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권리선언 이외에도, 1953년의 〈독서권 선언(Freedom to Read Statement, 2000년 개정)〉, 1972년 〈청소년의 도서관 접근권 원칙(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1991년 개정)〉, 〈인터넷필터링에 대한 입장(Statement on Internet Filtering, 1997)〉을 공포하였다. 또, 미국대학도서관협회(ACRL :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는 별도로 〈대학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원칙(Intellectual Freedom Principles for Academic Libraries, 1999)〉을 발표하고 대학본부나 교수회 등을 통해 이 원칙에 규정된 내용들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계는 2001년의 9.11사태와 〈애국법(Patriot Act)〉의 통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에 직면하였는데, 정부당국이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것이 그 예이다. 한편으로는 부시 행정부가 335개의 도서관에 미국의 지리정보를 수록한

7) 필자는 2001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FAIFE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FAIFE에 보고된 다양한 이슈들과 세계 각국의 관련 사례, 그리고 문헌자료들을 수집하고 기초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적자유와 검열 도서관에서의 접근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www.kci.go.kr

CD-ROM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LA의 OIF가 주가 되어 반대주장을 펼치고 여러 산하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 대응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8)]

세계 각국이 지적자유에 대한 법령이나 선언문들의 공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데,[9)] 영국의 경우 도서관협회(CILIP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가 주축이 되어 〈지적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부에 의한 검열에 관한 선언(Intellectual Freedom, Access to Information and Government Censorship, 2005)〉, 〈정보접근권선언(Statement on Information Access, 2002)〉, 〈도서관에서 필터링 소프트웨어사용에 관한 입장(The Use of Filtering Software in Libraries, 2002)〉 등의 정책문서를 발표하였다.

호주에서는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ALIA)가 1971년에 공표한 〈모든이에게 자유로운 도서관서비스와 독서권 보장 선언(Free Library Services to All, Freedom to Read, 1979, 1985 개정)〉을 개정하여 2001년 〈지적자유선언(Intellectual Freedom Statements)〉[10)]을 공포하였고, 2007년 〈정보접근의 자유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도서관협회(CLA)가 〈지적자유에 관한 입장(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1974 / 1985 개정)〉과 〈대학도서관에서의 표현의 자유 선언(Stat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in Research Libraries, 1986)〉 등의 문서를 통해 지적자유 보호에 관한 도서관계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4년 일본도서관협회가 도서관의 지적자유 개념을 내포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図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을 발표하여 도서관활동의 중립성을 주창한 이후, 1979년 이를 개정하여 지적자유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하에 도서관의자유위원회(図書館の自由委員會)를 설치하여 도서관과 정보유통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11)]

EU의 경우는 1995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매년 9월 국제 알권리의 날(International Right to Know Day)을 제정하고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알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 지적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12)]

---

8) The Freedom to Read Statement, 〈http://www.ala.org/ala/aboutala/offices/oif/statementspols/ftrstatement/freedomreadstatement.cfm〉 [cited 2011. 1. 19].
9) IFLA. "Intellectual Freedom Statements", 〈http://www.ifla.org/en/publications/intellectual-freedom-statements-by-others〉 [cited 2011. 2. 20].
10) ALIA Intellectual Freedom Statements, 〈http://archive.ifla.org/faife/ifstat/aliastat.htm〉 [cited 2011. 2. 20].
11) 日本図書館協會, 図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http://www.jla.or.jp/ziyuu.htm〉 [cited 2011. 2. 20].
12) EU International Right to Know Day, 〈http://www.ombudsman.europa.eu/activities/calendareve nt.faces/en/400/html.bookmark〉 [cited 2011. 2. 11].

www.kci.go.kr

이렇게 지적자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ALA의 '도서관권리선언'이 처음 소개된 이래 일부 학자들이 도서관과 지적자유 문제에 천착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도서관과 지적자유, 특히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정한 '도서관윤리선언'의 일부 조항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이용자의 접근권, 일체의 검열반대 등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고, 이어서 도서관협회가 '도서관권리선언'을 준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도서관윤리선언의 지적자유 관련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 지적자유에 관한 부분 - 한국도서관협회(1997)

1. [사회적 책무]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가.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나.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
   다.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라. 도서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를 열어가는 문화적 선도자가 된다.
(중 략)
6. [자료] 도서관인은 지적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
   가. 도서관인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지키는 책임을 진다.
   나.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이하생략)

Ⅲ. 장서개발에 있어서의 논점

1. 선정 vs. 검열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핵심요건은 장서이다. 장서는 지역사회 지식의 기반을 이루는 일차적인 자원으로 도서관의 존재의의는 장서로부터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서를 구축하는 일이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도서관은 예산의 한계나 물리적 공간의 부족, 도서관의 목표나 이용자의 수준 등의 이유로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기본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서선택에 있어 교육주의적 양서론을 주장하는 가치론과 공공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인식 다원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를 중시하는 요구론, 그리고 선택환경론적 입장의 차이가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는 결국 자료선정에 있어서 사서가 과연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되었는데, 사서의 편견을 배제하는

www.kci.go.kr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과 검열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계속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에이샤임(Asheim)은 검열과 선택을 나누는 경계선은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주체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의도와 동기, 그리고 선정 기준의 적용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작용하는가, 가치판단과 압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또는 암묵적인 위협 요인을 상정하는가, 그리고 생각의 자유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생각의 통제를 지지하는가 하는 등의 추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용자의 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파이얼코프(Fialkoff)는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금지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사서의 존재이유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이용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고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선택자로서의 사서가 양측 모두와 일대일로 또는 일대 집단으로 대화와 토론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4]

2. 국내외 도서검열 사례분석

가. 해외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열이란 어떠한 저작의 내용 문제로 인하여 공권력이나 기타 압력에 의하여 자료의 접근 가능성에 변화가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은 도서나 여타자료가 도서관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서, 출판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것 이외에도 표식을 부착하거나 금지, 제외, 제거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5] 검열은 정부기구의 공식적인 검열과 시민단체의 압력, 출판사와 사서 등에 의한 자체검열로 구분되지만, 에이샤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검열인 경우가 많다.

도서관 장서에 대한 외부의 검열은 이미 구입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나 제외, 제적 요구로 집약된다. 즉 도서관 이용자, 관리자, 기타 집단이 도서관 장서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금서'의 형태로 범주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발간, 판매 또는 유통이 금지된 책(Banned Books)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의 검열의 개념은 대부분 금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서조치에 따른 사서의 기피현상까지도 검열로 본다.

금서조치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1) 기성 체제나 제도에 대한 비판, 고발 등의 정치적 이유 ; 2) 종교적인 이유 ; 3) 음란서적, 외설적 표현 ; 4)표현방식, 인종차별, 약물사

13) Lester Asheim, "Not Censorship but Se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Vol.28(1953), pp.63-67.
14) Francine Fialkoff, "Selection not Censorship," *Library Journal*(May 15, 2004), p.69.
15) 이명희,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5권, 제1호(2004), p.195.

www.kci.go.kr

용, 사회계층, 성정체성 등 독자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견해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16]

사례로 존 스타인백의 1939년 작 분노의 포도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농민의 생활을 사회주의적으로 묘사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1966년 5회, 1973년 4회, 1977년 8회, 1982년 6회, 1988년 2회 등의 검열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ALA에서는 검열행위로 규정하고,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있어 정치 이념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도서관계에 있어서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ALA 도서관권리선언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17]

종교적 이유에 의한 금지 사례로 조안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들 수 있다. 2002년 영국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성서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호주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 금서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18] 해리포터가 독자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점을 이유로 검열 대상이었던 반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독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2006년 레바논 정부는 예수를 모독하는 소설이라는 이유로 서점에서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했으며, 이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19]

사회적인 이유로 검열 대상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너대니얼 호손의 1850년작 주홍글씨(Scarlett Letters)는 초판이 곧 매진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지만, 종교계에서는 '추잡한 이야기'라며 비난을 받았다. 1961년 미국 미시건주의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문학수업에서 이 소설의 외설성을 이유로 교과과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1977년에는 이 책이 교재로서는 물론 추천도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해 미주리주에서 한 학부모가 책에 욕설이 나온다며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제적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서가 나서서 이 소설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한 예도 있다.[20]

최근의 사례로 2008년 미국 도서관계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된 영국의 만화가 앤디 라일리(Andy Riley)의 블랙코미디 만화인 자살토끼(The Book of Bunny Suicides)를 들 수 있다. 주인공인 토끼가 기발하고 엽기적인 아이디어로 자살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볍게 웃고 즐길 정도이지만 미국 오레곤주의 Central Linn 고등학교에서 도서관 장서를 대출하여 집에 가져간 학생의 어머니인 앤더슨(Anderson)이 어린 아이가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

16) 니컬러스 J. 캐롤리드스 등, 100권의 금서 : 금지된 책의 문화사, 손희승 역(서울 : 예담, 2006), pp.580-58. ; 이명희,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저해하는 사례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2권, 제2호(2001), p.149.

17) Judith Krug, "ALA and Intellectual Freedom : A Historical Overview," Intellectual Freedom Manual, 7th ed, (Chicago : ALA, 2006), p.18.

18) 호주 기독교 대학, 해리포터 금지, YTN 2003. 7. 2. ; 이명희, 전게논문, pp.206-207.

19) 한겨레신문, '다빈치코드 반대와 표현의 자유'(2006. 4. 11),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767.html〉 [cited 2011. 2. 11].

20) 캐롤리드스 등, 전게서, pp.592-596.

www.kci.go.kr

며 교장에게 학교도서관에서 그 책을 제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장은 학교 규정에 따라 심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앤더슨은 결정 전까지 책 반납을 거부하고 책을 다시 구입한다면 태워버리겠다고 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서관계와 지적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앤더슨을 비난하게 되면서 결국 책을 반납하였다. 그 이후 학교 위원회에서는 해당도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21]

리차드슨(Justin Richardson)과 파넬(Peter Parnell)의 2005년작 그림책인 *And Tango Makes Three*는 센트럴 파크의 동물원에 사는 펭귄가족의 이야기로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도서이다. 로이(Roy)와 사일로(Silo)라는 수컷 펭귄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 살다가, 사육사가 놓아 둔 알을 품어 새끼 펭귄 탱고가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작가들은 이 책을 통해 가족애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이 책이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자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도서관에서 금지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 미국 내의 일부 주에서는 이 책이 논픽션으로 이관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의제기가 가장 많은 도서 가운데 하나이다.[22]

이렇게 미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해마다 판매금지, 혹은 제한적 판매 요청이나, 공공도서관 소장이나 교과서 등재에 대한 이의제기가 되는 책과 저자들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서관협회의 주관 아래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서, 교사, 학부형들이 중심이 되어 해마다 공격받는 책과 저자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상징적으로 '금서 주간(Banned Books Week)'을 정하여 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사실 ALA에서는 "Challenged Books"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매년 9월 금서 주간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금서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OIF에 보고된 이의제기는 총 460건인데, 그 중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도서 10종과 사유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23]

ALA는 책을 금지하거나 이의를 제기(Challenge)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일 뿐 아니라, 이것이 사서의 자기 검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서 주간'은 바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행사로, 도서관, 학교, 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책을 구입하지 않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의 지적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까지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21) "Mom wants to ban, burn 'Bunny Suicides'," 〈http://www.oregonlive.com/news/index.ssf/2008/10/ore_mom_wont_return_bunny_suic.html#post〉 [cited 2011. 2. 10].
22) "And Tango Makes Three," 〈http://en.wikipedia.org/wiki/And_Tango_Makes_Three〉 [cited 2011. 2. 11].
23) Banned Books Week : Celebrating the Freedom to Read, 〈http://www.ala.org/ala/issuesadvocacy/banned/bannedbooksweek/index.cfm〉 [cited 2011. 2. 11].

www.kci.go.kr

〈표 2〉 2009년 가장 의의제기가 많았던 도서 10종[24]

순위	저자	서명	사유
1	Lauren Myracle	ttyl ; ttfn ; l8r, g8r(series)	약물, 노출, 공격적 언어, 외설적 내용(sexually explicit), 연령대 설정 부적합(unsuited to age group)
2	Peter Parnell & Justin Richardson	And Tango Makes Three.	동성애
3	Stephen Chbosky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반가족(anti-family), 약물, 동성애, 공격적 언어, 종교적 관점, 외설적 내용, 자살, 연령대 설정 부적합
4	Harper Lee	To Kill A Mockingbird.	공격적 언어, 인종차별, 연령대 부적합
5	Stephenie Meyer	Twilight.(series)	종교적 관점, 외설적 내용, 연령대 설정 부적합
6	J.D. Salinger	Catcher in the Rye,.	공격적 언어, 외설적 내용, 연령대 설정 부적합
7	Jodi Picoult	My Sister's Keeper.	동성애, 공격적 언어, 종교적 관점, 성차별, 외설적 내용, 연령대 설정 부적합, 폭력
8	Carolyn Mackle	The Earth, My Butt, and Other Big, Round Things	공격적 언어, 외설적 내용, 연령대 설정 부적합
9	Alice Walker	The Color Purple	공격적 언어, 외설적 내용, 연령대 설정 부적합
10	Robert Cormier	The Chocolate War	공격적 언어, 외설적 내용, 연령대 설정 부적합

2001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동안 ALA에 이의가 제기되었던 사례는 총 4,312건이며, 이 중 "외설적인 내용(1,413건)", "공격적인 언어 사용(1,125건)", "연령대에 맞지 않는 내용(897건)", "폭력(514건)", "동성애(344건)", "종교적 견해(269건)", "반(反)가정적인 내용(109건)" 등의 순서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25] 이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502건은 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것이며, 33%는 학교도서관, 23%인 1,032건은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100건이 발생하였지만 대학도서관에서 발생한 사례는 29건에 불과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도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0건 가량의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공공도서관에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학교도서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유형별로는 단행본에 대한 이의가 약 83%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내용상 외설성의 문제에 따른 이의제기가 76%로 가장 많고, 연령대 설정 부적합(68%), 공격적 언어(34%), 폭력(32%), 노출(28%), 인종차별(4%) 순으로 나타나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에 의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6]

---

24) Top ten most frequently challenged books of 2009, 〈http://www.ala.org/ala/issuesadvocacy/banned/frequentlychallenged/21stcenturychallenged/2009/index.cfm〉 [cited 2011. 1. 21].

25) Number of Challenges by Year, Reason, Initiator & Institution(1990-2009), 〈http://www.ala.org/ala/issuesadvocacy/banned/frequentlychallenged/challengesbytype/index.cfm〉 [cited 2011. 1. 22].

26) CLA Advisory Committee on Intellectual Freedom. Annual survey of challenges to library resources and policies in Canada for 2009,

www.kci.go.kr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검열문제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 자원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공도서관 인터넷 음란물 차단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성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필터링장치를 하는 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002년 ALA가 도서관 이용자들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함께 미국의 어린이인터넷보호법(CIPA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을 제소한 것에 대한 최종결정인데, 정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CIPA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도서관에서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27]

한편 최근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하여 비밀로 분류되었던 정보들이 대중들에게 유통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이슈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미국 의회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이 사이트에 대한 통제가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위키리크스 차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대가 확산되었으나 의회도서관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유통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도서관의 공공성은 물론이거나와 기본적인 연구기능의 수행을 차단하고 있다는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28]

나. 국내사례

서양에서는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많고 내용적으로 외설적 표현이나 동성애 등의 사유로 인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검열 사례가 주를 이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상황, 분단, 독재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금서와 검열로 대표되는 사상통제의 역사를 거쳐 왔고, 이에 따라 적어도 제 6공화국까지는 이른바 이념 서적이라 불리는 도서가 금지되거나 도서관 서가에 꽂힐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 시기까지는 공산주의 계열의 저작, 친북 문인들 및 공산국가 출신 작가의 작품 등이 금지대상이었다. 제 3공화국 시기는 원천적 금서가 많아 김상협의 모택동사상(1964), 김준엽, 김창순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1967), 김지하의 오적(1970) 등 반미의식, 계급의식 등을 담은 저작이 금지대상이었다. 유신시대에는 불온도서 33종, 음란저속도서 44종 등 77종이 판매 금

〈http://www.cla.ca/Content/NavigationMenu/CLAatWork/Committees/Challenges_to_Canadi.htm〉 [cited 2011. 1. 15].

27) CPPA, COPA, CIPA : Which Is Which? 〈http://www.ala.org/ala/aboutala/offices/oif/ifissues/issuesrelatedlinks/cppacopacipa.cfm〉 [cited 2011. 1. 22].

28) Why the Library of Congress Is Blocking Wikileaks, 〈http://blogs.loc.gov/loc/2010/12/ why-the-library-of-congress-is-blocking-wikileaks/〉. ; Blocking Access to Wikileaks May Harm CRS, Analysts Say, 〈http://www.fas.org/blog/secrecy/2010/12/crs_block.html〉 [cited 2011. 1. 6].

www.kci.go.kr

지되었고.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1974), 장준하의 죽으면 산다(1975), 김동길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1978), 한완상의 불균형시대의 문제의식(1980)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제5공화국시기에는 풀빛, 일월서각, 돌베개, 창작과 비평사 등 이른바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금기로 인식되었으며,[29]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한국민중사 사건 등 금서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 도서관에서는 신문을 구독하고자 하는 사서들과 구독에 반대하는 관리자들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았던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제 6공화국 들어서도 '도서심의 결정목록'의 형태로 금서가 존재하였다. 정치적인 관점 이외에도 1990년대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이현세의 만화 천국의 신화 등이 한국적 성윤리와 배치되는 도서로 판매 금지되었다.[30]

1990년대 들어 금서의 지형이 변하였는데 이전까지는 대부분 정치,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서적이 그 대상이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 선정성 등 사회문화적 사유로 금서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금서조치가 해제된 도서들이 서점과 도서관의 인기 리스트를 차지하면서 우리사회의 민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책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장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파기, 소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서와 도서관이 도서 선정과 수집에서 이와 같은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사실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31]

한편, 최근 지적자유 보장 분위기에 역행하는 일례로 현 정부 들어 2008년 국방부가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눈 23종의 '불온서적 목록'을 제시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 무단 반입 시 장병 정신전력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불온서적 지정 사유와 리스트는 〈표 3〉과 같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한국작가회의는 "대학교재와 베스트셀러에 오른 서적까지 불온 딱지를 붙여 지적 선택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은 희극적인 발상"이라며 금서목록 폐기를 주장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32] 출판계에서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고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9) 김영기,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사회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p.118.
30) 상게논문, pp.105-111. ; 이명희, 전게논문, pp.202-204.
31) 오마이뉴스(2004. 5. 24).
32) 한국일보(2010. 10. 29).

www.kci.go.kr

〈표 3〉 2008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리스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	사유
노암 촘스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한울	2007	북한찬양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2000	
전상봉 지음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 오션	시대의 창	2007	
하종강 외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작은책 스타가 바라본 세상	철수와 영희	2007	
노암 촘스키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이후(시울)	2007	
전영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육일오	2006	
최한욱	핵과 한반도	육일오	2006	
최한욱 외	북한의 미사일 전략	육일오	2006	
백남룡 지음	벗	살림터	1992	
현기영 지음	지상에 숟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1999	
허영철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비전향장기수 허영철의 말과 삶	보리	2006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2008(개정)	반정부/반미
김남주	꽃 속에 피가 흐른다	창비	2004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부키	2007	
김진숙 지음	소금꽃나무 - 우리 시대의 논리 5	후마니타스	2007	
한홍구 지음	대한민국사 세트 - 전 4권	겨레출판	2006	
조성오 지음	우리역사이야기 - 전 3권	돌베개	199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미디어	2002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엮음	21세기 철학 이야기	코리아미디어	2004	
강대석 지음	김남주 평전	한얼미디어	2004	
?	대학시절	?	?	
한스 피터 마르틴 외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3	반자본주의
프레시안 엮음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프레시안북	2008	

역설적인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점가에서 이들 책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불온서적 코너가 따로 설치되어 불티나게 팔리는 등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당해 년도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으며, 현기영의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와 삼성그룹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판매가 확대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나 금서 조치 2년 여 만인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의결과, 이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어 버렸다. 즉,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기본권보다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온도서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반

www.kci.go.kr

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으로서,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불온서적이라고 지정한 도서 중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노암 촘스키의 저서들은 자성적 미국 비판론으로서 미국에서도 높이 평가된 책이며, 북한의 우리식 문화는 대학의 교양강의 교재이고, 대한민국사도 역사교양서로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는 도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등은 문화관광체육부와 대표적인 학술단체 등으로부터 우수 또는 추천도서로 선정되어 권장도서 목록에 올라 있는 도서들로서 정부・학계・문화계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도서들이며, 이미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이기도 하다.

즉, '불온서적'이라는 표현 자체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의 주체도 서양의 사례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 우수도서로 지정하고 공적 예산으로 구입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에 배포한 도서들을 금서로 지정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3.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이러한 선택환경에서 정작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고 장서로 개발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장서개발의 선택환경론적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 정치적 상황이 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비록 최근 우리나라 국방부의 조치가 비록 병영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 한정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도서관 장서의 영속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여야 마땅하다. 역사를 통틀어 서양의 도서관계가 공권력의 정보통제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던 것이 우연은 아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적자유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문화된 지적자유 보호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 도서관에서는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에서 지적자유에 관한 지침을 반드시 포함하여 체계적인 장서구성의 틀을 제공함은 물론 자료선정이 보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자유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기준의 확립으로 외부의 압력과 검열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업무에서 사서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서개발정책에 성문화된 지적자유보호 지침을 포함하여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읽는 자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허용케 함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광장으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현태에 따르면 자료선정의 지침이 대외적으로 이용자에게 선정업무에 있어 객관적 기준으로

www.kci.go.kr

서 명분상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자료선정 지침에 도서관 지적자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수집의 뚜렷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의 자료선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나 이의제기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자료수집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 철학적인 대응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33]

미국에서는 OIF의 Intellectual Freedom Manual에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이나 선정지침을 작성할 때 반드시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도서관의 사명과 장서의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독자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독서권의 보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서의 장서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이의 제기가 청문회로 이어질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지침 등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있어 실무에 있어서의 지적자유 보장활동을 표준화하고 실무사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34]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도서관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장서개발정책이 공개되어 있는 일부 도서관의 경우에도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서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2011년 1월 발표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서 다소 간결하지만 지적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 향후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표준적인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의 표준안이 마련되면 도서관의 서비스 목적, 이용대상, 장서의 범위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선정과 장서개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용자의 지적자유를 보호하고,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장서개발에 있어서 이의제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도서관은 IFLA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과 '디지털도서관선언'(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저작권법'의 이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 도서관장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이 시대의 지적·정신적 풍요와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장서개발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며, 도서관 및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 및 이용의 평등권을 확립한다.[35]

33) 정현태, 전게서, pp.62-63.
34) ALA. Intellectual Freedom Manual. 7th ed. (Chicago, ALA, 2006).
35)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http://www.nl.go.kr/intro/task/jangseo(20110101).pdf〉 [cited 2011. 2. 22]. ; 윤희윤, 장덕현. "국가도서관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2010), pp.107-122.

www.kci.go.kr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호 책무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언급된 지적자유 보호 의무 지침이 IFLA 선언을 근거로 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직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불온서적'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서관계가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천명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ALA의 CIPA 위헌소송에서 보듯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가능성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36]

Ⅳ. 결 론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서비스나 복지와 같은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넘어 그 정치적 의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식과 정보는 공공자원이며 주변 공공도서관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치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보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정보의 사유화, 지식의 권력과의 결합 등의 추세가 강화될수록 지적자유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서둘러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정책과 대안들을 정비하여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정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정보 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이미 많은 나라들의 도서관 전문직단체들이 지적자유에 대한 법령이나 선언문들을 명문화하여 발표하고, 특히 도서관 장서에 가해지는 정보통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서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자료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론과 이용자의 요구를 중시하는 요구론이 대립하면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도전과 이의제기가 있어 왔다. 검열의 주체는 국가나 외부의 압력단체 또는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 사상적, 종교적인 이유와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도서 반입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사서들은 지적자유에 대해 옹호해 왔지만 의식적, 무의식적 자체검열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검열을 막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나 일관성있는 대안이 부재하였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

36) The Freedom to Read Statement, 〈http://www.ala.org/ala/aboutala/offices/oif/statementspols/ftrstatement/freedomreadstatement.cfm〉 [cited 2011. 1. 19].

www.kci.go.kr

따라서 도서관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도서관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 내/외적으로도 연대와 실천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도서관이 검열에서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나이, 출신지역, 거주지,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읽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도서관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논의가 미진한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보고자 하였다. 검열, 독서권, 그리고 정보접근권 등 지적자유 문제 전반에 관한 표준적 해석과 이해를 위해 미국 등 서양과 우리나라의 관련 사례와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과 지적자유 문제에 대한 관련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여러 사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도 도서관과 지적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저작권, 표현의 자유 등 알권리와 인권문제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있다. 이에 우리사회에서 일반적 인식에 그친 알 권리, 지적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켜 정보복지와 정보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